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본다 '전국 최초'

융합돌봄 지원센터 설치…24시간 행동치료·돌봄 병행
이용섭 시장 "민간공항 이전 시민 여론조사 그대로 추진"

시정질의 답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인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열린 조석호 의원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시정 질문에 답변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6월 3일 광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려고 광주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광주발달장애인 부모연대로부터 6가지 지원정책을 제안받고 태스크포팀을 꾸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등 5대 분야, 10대 과제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이어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6가지를 제안받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발굴 TF'를 꾸려 집중 검토한 끝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등 5대 분야, 10대 과제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24시간 행동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부모들이 입원, 애경사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경우 긴급 돌봄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말, 휴일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돌봄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휴일 없이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365일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는 전환 전담팀을 신설해 광주 8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 향상과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이 시장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도 안 된다"면서 "더이상 단 한 분의 시민도 억울하게 가시는 일 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한 삶을 사는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는 민간공항 이전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김익주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사항이 아닌 시민 건의·제안으로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여론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소통 광주 플랫폼'에 의견을 제시했고, 100명 이상 토론에 참여해 규정에 따라 시민권익위는 전원위를 열어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권익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1년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권익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권고하면 시장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 여부는 보류했다.

이 시장은 또 2018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에 협력하기로 한 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당시 협약서를 보면 김영록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통합된다면 광주 군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이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약속은 지켜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영산강 수질 더 악화…해수 유통해야"

5년 전보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배 증가…조옥현 "오염방지단 설립을"

4대 강 중 유일하게 생활용수로 쓸 수 없는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해수유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6일 전남도 현안으로 도정질문을 통해 영산강 수계 물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2016~2020)간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본류 13개 지점의 수질검사 결과 2곳을 제외한 11개 지점에서 2016년에 비해 수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시 생활 쓰레기와 부유물로 서구 마륵동 지점에서 측정된 수질검사(BOD)결과치는 지난 2016년 연 평균값 ℓ당 4.2mg에서 2020년 9월까지 연 평균값이 8.5mg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물의 오염원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뉘는데 유기물의 정화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높을수록 수질이 나쁜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물의 경우에는 유기물과 비교하면 정화에 필요한 산소가 400배가 더 필요하다.

영산강의 총 인량과 총 질소량은 화학적 세제오염물과 가축의 분뇨 등 비료에서 비롯하는데, 인과 질소량이 늘어나면 부영양화가 증가하고 이는 녹조 발생을 일으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현재 영산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는 빗물에 의해 비점오염원이 점오염원으로 전환돼 하천으로 유입되고 다시 호소수의 증가로 오염된 토양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영산강은 수질 악화, 회유성 어류 이동통로가 차단되고, 어족자원이 황폐화로 잡은 물고기도 먹기가 두려운 상황"이라며 "영산강은 점점 자정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하굿둑 개방으로 생태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가칭 영산강오염방지단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며, 국내 오염호수의 대명사였지만 해수유통으로 빠르게 복원되고 있는 시화호의 경험치와 최근 국가정원 2호 지정된 태화강의 기적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

김영록 지사 "지역균형 뉴딜사업 철저히 대비해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되는 지역균형뉴딜이 국회에서 포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진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지역균형뉴딜이 정부안 자체에는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반영된 후 공모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잘 만들어 필요시 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전남의 경우 농어촌공사와 정부산업진흥원 등 협업가능한 공공기관이 있어 잘 협업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전남도의 해상풍력 관련 사업은 좋은 내용이었다"며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국가 지원,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기 구축, 여러 부처를 인허가를 총괄할 해상풍력 개발지원본부 설립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말하고 이런 건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착공 시기를 2021년 봄으로 정한 김 지사는 2025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민에게 이익을 공유해 돌려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치에 실패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와 관련 "지속적인 추진 모멘텀을 살려 전남의 과학기술자문위를 통해 계속 이슈를 살려 나가 전남이 반드시 대형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요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각종 정책개발을 통해 큰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 등 작은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줄 것"도 아울러 독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소방, 취약계층에 마스크 2만매 지원

㈜에이제이인터내셔널 후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취약계층 400가구(한 가구당 50매)에 마스크 2만매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에이제이인터내셔널이 소방청을 통해 마스크 16만매를 기부하며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를 희망한데 따른 것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 중 2만매를 지원받았으며,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과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과 연계해 보급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